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2년 1호
MAR 31 2022

발간년월 2022년 3월 31일(2022년 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90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Editor's Note

02

신선한 눈으로 북한 보기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기획 칼럼

03

위기의 북한경제, 코로나19 이후 북한 산업 현황과 전망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의 회고와 과제 : 바닥에서 새로운 틈새 찾기

박종철(대전대학교 객원교수)

평화협정의 체결과 해양수산 의제 검토

홍성걸(해양정책학회 연구위원)

北 리뷰

27

[서평]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강동완 저)

허선혜(전북대학교 연구교수)

북한 알기

30

북한 드론: 방송 촬영에서 농사까지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北 소식

33

북한 해양·수산 기사 ('22.1~3월)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2.1~3월)

진희권(인제대학교)

북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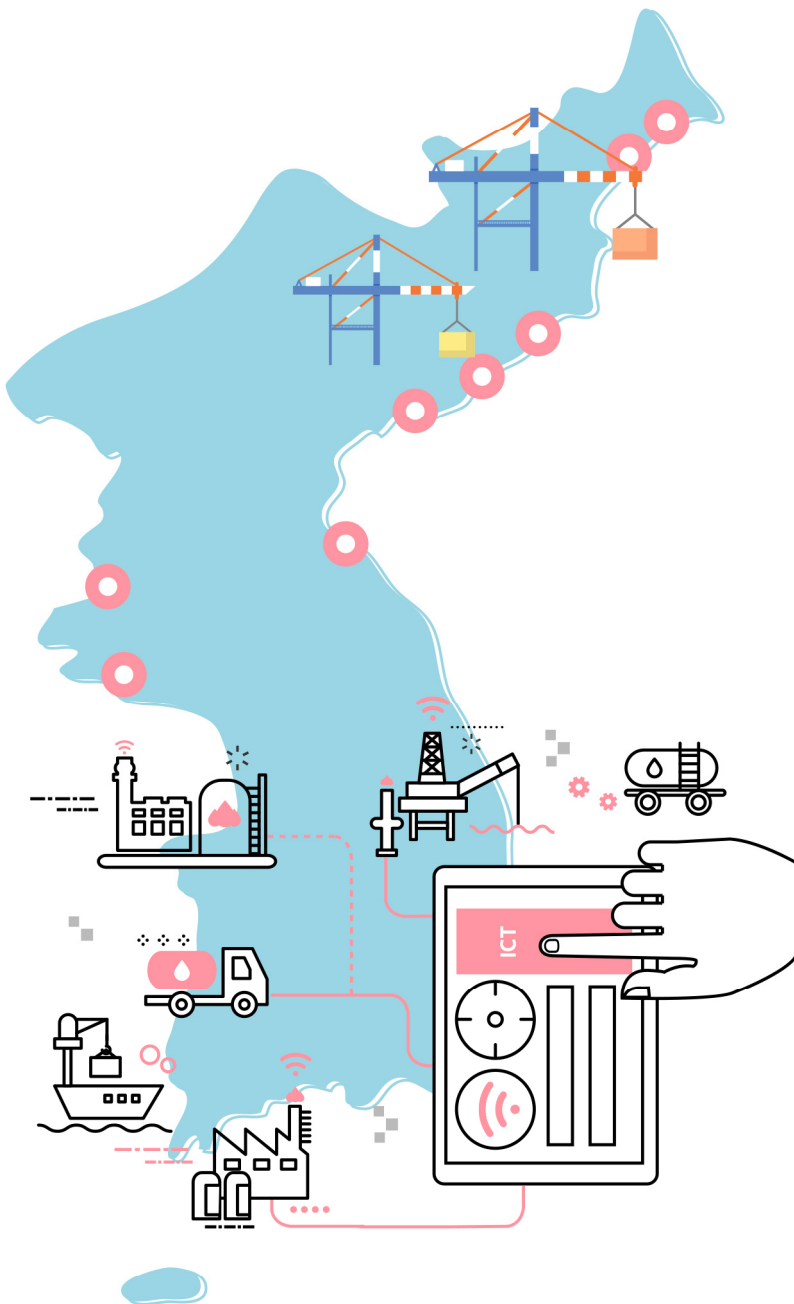
45

북한 물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용(데일리NK 편집국장)

북한의 물가: 환율, 쌀, 휘발유 그리고 수산물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채수란 전문연구위원 Tel_051-797-4790, E-mail_9orchid7@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Editor's Note

신선한 눈으로 북한 보기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연구위원)

2022년 1호는 세 분의 욕구가 담긴 기획 칼럼으로 문을 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경제 진단,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막힌 남북교류협력의 틈새 찾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물 분야의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등 각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언론과 내공을 쌓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북한과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신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지난 일을 정리하며 앞으로 할 일을 점검해보는 취지이다.

北리뷰와 북한 알기는 다소 새롭다. 신선한 시각으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서적을 꾸준히 발간하는 강동완 교수의 따끈한 신작을 신진연구자인 허선헌 교수가 소개해주었다. 북한에 가보지 않고 북한이 발간하는 문헌을 접하지 않고 손발을 움직여 북한을 알아보는 기발한 접근법은 북한이 국경을 닫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교류협력의 끈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또 저 멀리 딴 세상인 듯 보여도 북한 역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고 현장과 정책에서 드론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소식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화 트렌드가 남북교류협력에도 반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북한해양수산물리뷰가 2020년부터 재발간되어 이제 3년차를 시작한다. 첫 해는 모든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둘째 해에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들쭉날쭉함을 쳐내고자 했다. 여러 분야별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모시고 의견을 모았더니 기획회의도 풍성해졌다. 올해부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스타일을 바꾸었고 북한의 수산물 가격을 제공하는 통계 코너를 신설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물 분야의 북한 통계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해양수산물리뷰는 계속해서 신선한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고자 한다. 관련 연구와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 칼럼

위기의 북한경제,
코로나19 이후 북한산업 현황과 전망

이 석 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 산업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의 부분적인 회복과정에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뎠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공업과 기계공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도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UN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의 제조업은 다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2. 코로나19 이후 북한산업 현황

(1) 코로나19 이전 북한의 산업

북한은 북한 내에서 공급되는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1980년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등 에너지에서부터 금속 및 화학소재, 공작기계와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그리고 식량 및 소비재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구축하였다. 이 산업구조는 1990년대에 에너지난과 금속, 화학, 기계 등 자본재 산업의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을 저점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대외무역의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2000년대 북한경제의 제한적인 회복을 추동하고 있다. 대외무역은 무연탄 등 지하자원과 봉제의류 등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기반으로 한 금속 및 화학소재, 기계류, 경공업용 중간재 등의 수입 확대로 2000년대

기획 칼럼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 및 부분적인 성장에 기여하였다. 대내외 시장의 확대에 따라 대외무역과 내수시장이 상호 선순환하면서 북한산업이 제한적으로 회복 및 성장하였지만, 금속 및 화학소재 부문의 공급 역량이 동반하여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산업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북한 핵 실험에 따른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로 무연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농수산물, 그리고 봉제의류 등의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만, 석탄광업과 철광업 등 북한의 수출산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연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로 성장하고 있어서, 외화 수입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그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철강 및 철강제품, 전자제품과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입 통제는 북한산업 전반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위축되었으며, 전력이나 광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서 부품이나 소재 부족으로 신규 설비투자는 물론이고,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 통제는 즉각적인 생산감소의 효과보다는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역량과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누적하여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UN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비제재 품목인 섬유류, 식품 및 식품용 원재료,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의 수입은 유지되었으며, 이렇게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하여,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은 유지되었다. 주로 경공업이 수입산 중간재를 최종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시장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되었다. 2018년에 중화학공업 생산이 12.4%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공업 생산 감소는 2.6%에 그쳤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1%p 성장하여 같은 해 북한경제 0.4% 성장에 기여하였다. 농업, 전력, 그리고 건설업은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UN 대북 경제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았다. 농업과 전력은 대외경제관계보다는 강수량이나 자연재해 등 기후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의 확대로 운수, 음식, 숙박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함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에 의한 상업·유통업이 위축을 상쇄함으로써 2018~2019년 상당폭 성장하였다.

기획 칼럼

<표1> 201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산업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1.3	1.1	1.0	-1.1	3.9	-3.5	-4.1	0.4	-4.5
▪ 농림어업	3.9	1.9	1.2	-0.8	2.5	-1.3	-1.8	1.4	-7.6
▪ 광공업	1.3	1.5	1.1	-3.1	6.2	-8.5	-12.3	-0.9	-5.9
- 광업	0.8	2.1	1.6	-2.6	8.4	-11.0	-17.8	-0.7	-9.6
- 제조업	1.6	1.1	0.8	-3.4	4.8	-6.9	-9.1	-1.1	-3.8
• 경공업	4.7	1.4	1.5	-0.8	1.1	0.1	-2.6	1.0	-7.5
• 중화학공업	0.2	1.0	0.5	-4.6	6.7	-10.4	-12.4	-2.3	-1.6
▪ 전기·가스·수도업	1.6	2.3	-2.8	-12.7	22.3	-2.9	5.7	-4.2	1.6
▪ 건설업	-1.6	-1.0	1.4	4.8	1.2	-4.4	-4.4	2.9	1.3
▪ 서비스업	0.1	0.3	1.3	0.8	0.6	0.5	0.9	0.9	-4.0
- 정부	-0.2	0.3	1.6	0.8	0.6	0.8	0.8	0.5	0.8
- 기타	0.8	0.4	0.5	0.6	0.5	-0.3	1.2	1.8	-18.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ecos.bok.or.kr>)

(2)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산업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 경제적 타격을 주었는데, 북한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의 하나이다.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북한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악화되자 국경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제재로 2017, 2018년 각각 14.5%와 51.6%씩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16% 증가한 북중 무역이 2020년에는 다시 80.8%나 감소하였다. 수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무역감소는 주로 81.1% 감소한 수입 급락에 의해서 확대되었다. 특히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유지되었던 식물 등 섬유류, 밀가루와 설탕 등 식품 및 식품 재료, 그리고 플라스틱제품 등 화학제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섬유류, 식품가공업, 그리고 일용품 등 경공업의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UN 대북 경제제재 이후 중화학공업보다 상대적으로 후퇴 폭이 적었으며, 2019년에는 소폭이나마 성장하였던 경공업이 2020년에는

기획 칼럼

7.5%나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그리고 국경봉쇄로 외국인 관광이 중단되어 대북 제재에 의한 상업유통 분야의 위축을 관광 및 관련 업종이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서비스업도 4%나 역성장하였다. 이렇게 UN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다소라도 완화해주던 경공업과 서비스업마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큰 폭으로 후퇴함에 따라 북한경제 및 산업의 위기가 전면화하였다. 여기에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과 광업마저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에는 전기 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021년에도 지속하고, 그에 따라 기대하던 북중 육상 무역 재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북한경제와 산업의 위축은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2021년에도 대중 무역이 41% 줄었지만 무역제재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020년에 81%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무역규모 감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0년에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식품 및 식품재료의 수입 감소폭이 커서 식품가공업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서 농업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 1만 세대 건설 등 주택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설업도 다소 성장하였을 것이며, 광산의 수해복구 등으로 광업도 전년 수준은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2021년 북한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년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며, 북한경제와 산업의 위기상황이 완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기획 칼럼

<표2> 북한의 주요 경공업 원자재 대중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성섬유 (hs54+hs55)	258,226 (20.4)	298,485 (15.6)	191,519 (-35.8)	245,725 (28.3)	27,463 (-88.9)	14,138 (-48.5)
플라스틱제품 (hs39)	204,533 (21.7)	231,388 (13.1)	221,772 (-4.2)	274,547 (23.8)	35,778 (-87.0)	36,257 (1.3)
밀가루 (hs1101)	2,535 (-55.1)	32,623 (1,186.7)	63,047 (93.3)	73,178 (16.1)	35,478 (-51.5)	340 (-99.0)
당류 및 설탕 (hs17)	3,779 (-32.0)	38,655 (922.9)	40,011 (3.5)	44,397 (11.0)	32,490 (-26.8)	4,805 (-85.2)
콩기름 (hs1507)	98,110 (-5.6)	111,442 (13.6)	135,633 (21.7)	122,859 (-9.4)	65,835 (-46.4)	6,757 (-89.7)

자료: 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북한당국은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력갱생을 위해 금속 및 화학산업의 공급 역량 확충을 주된 과제로 설정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는 동시에 경공업의 지방화나 재활용 및 재자원화 등을 통하여 수입 중간재 부족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로 금속소재와 핵심 설비의 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핵심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대 북한경제 성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공업이 급속하게 1990년대 이전으로 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하던 중대형 경공업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지방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질 낮은 제품을 시군의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던 중소규모 경공업 공장이 주민에 대한 소비재 공급 역할을 떠맡고 있다. 재활용과 자원 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폐타이어나 폐수지를 재활용하여 질 낮은 제품을 일부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기획 칼럼

3. 향후 전망

금융기관-개인-기업 간 금융중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파산이 없는 북한에서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적자 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며, 중간재의 수입이 재개되면 이를 가공하는 기업의 가동률도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산업의 전면적인 위기는 2017년 UN 대북 경제 제재 강화에 따른 수출시장의 소멸과 소재 및 중간재, 그리고 기계류의 수입 중단에 따른 생산 역량 하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결되고, 북중 국경이 전면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산업이 다시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어려움은 심화되어 갈 것이다. 제재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무연탄이나 봉제의류의 비공식적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수출과 수입규모는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와 전자제품 등 자본재의 수입이 계속 억제되는 한 북한산업의 질적 약화는 지속될 것이다. 단기간에 무연탄이나 봉제의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품을 육성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여력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공업 등 북한 산업은 질의 하락과 함께 양적 축소나 정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산업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 문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 칼럼

남북경협의 회고와 과제
: 바닥에서 새로운 틈새 찾기

박 종 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1. 머리말

1990년대 초 냉전체제 해체와 발맞추어 시작된 남북경협은 남과 북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윈윈전략이며 대립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이르는 길을 닦는 첩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남북경협은 교역, 위탁가공, 직접 투자로 확대되었으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의 3대 경협은 선도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정점을 찍은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대북투자는 내리막을 걸었으며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관광객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2008), 천안함포격에 따른 5.24 조치(2010),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폐쇄(2016)가 결정타였다. 덧붙여 유엔제재는 남북경협의 숨통을 죄고 있다.

남북경협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공존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역사는 남북관계가 군사적 문제의 압도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양상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과 남북경협이 요동쳤다. 또한 한국정부의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변화도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국제환경, 북핵문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대체로 10년 단위로 시계추처럼 바뀌었다. 특히 한국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10년을 주기로 바뀌면서 남북관계와 함께 남북경협도 부침을 반복했다.

기획 칼럼

2. 탈냉전과 남북경협의 기반 조성(1988~1997)

1990년대 초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냉전해체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세계적 전환이 남북한으로 하여금 공존과 교류협력을 모색하게 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노태우정부는 사회주의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북방정책과 남북화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1988년 7월 발표된 [7.7선언]은 냉전해체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종식하고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신호였다. [7.7 선언]은 인적 교류, 남북교역, 북한과 외국과의 교역 용인,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협조 등과 같은 획기적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적대관계 청산과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포괄적 문서였다. 교류협력 분야는 지하자원 공동 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체육·언론 등에서 교류협력, 자유왕래, 철도·도로 연결 등을 망라하였다. 이후 경제분야 부속합의서가 체결되고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세부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당시 북한이 평화공존을 수용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받아들인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의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체제를 인정받는 한편, 남북대화해에 의해 체제생존과 불가침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교류협력이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한이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패키지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주)대우가 북한 도자기 500여점을 반입함으로써 남북교역의 물꼬가 터졌다. 민족 내부거래로 무관세가 적용된 남북교역은 북한 농수산물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 남측 기업이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이 완성한 완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이 시작되었다. 위탁가공은 가방, 배낭, 의류, 봉제완구 등 단순임가공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식품, 기계, 전자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생산시설과

기획 칼럼

기계 설비 등을 투자하는 직접투자도 제한적으로 성사되었다.

교역과 위탁가공 중심의 걸음마 단계의 남북경협은 1993년 북핵문제가 대두하고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암초에 부딪혔다. 남북관계가 핵 문제의 전개양상에 종속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3. 남북정상회담과 경협 활성화(1998~2007)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10여 년 동안 남북경협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북핵문제가 제네바합의(1994년) 및 9.19공동선언(2005년)에 의해 잠정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남북경협이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가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구도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이라는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정권이 남북경협을 구명줄을 잡으려고 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었다. 북핵문제의 잠정타결, 남한정부의 적극적 의지, 북한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남북경협이 호황기를 맞았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남북경협을 업그레이드하고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남북경협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연결의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여타 분야로 파급효과가 확대되었다. 금강산관광은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비정치적 색채를 띤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경협 확대의 발판이 되었다. 1998년 (현대) 정주영회장의 소떼 방북이라는 역사적 이벤트를 계기로 그해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화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개성공단사업으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 현대아산이 50년 동안 토지 200만평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고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법적 성격, 투자규모, 업종 등에서 교역이나 위탁가공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이었다. 북한의 토

기획 칼럼

지와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이었다.

개성공단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의 4개 경험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경협이 법적 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도 부수적 효과였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교통망을 건설하는 한편, 향후 남북철도 연결과 나아가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철도·도로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회랑 개설을 위해 지뢰 제거, 통로 개설,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수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한 경수로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경수로사업은 토목, 건설, 전력생산 및 송배전, 시설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경협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 사업이었다. 1995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 등을 거쳐 한국형경수로 건설이 추진되고 우리 측의 기술 및 자재 제공, 상주 인력 파견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위기의 여파로 경수로사업은 종합공정률 34.5% 상태에서 2006년 5월 종료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6자회담(2.13합의, 10.3합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이 합의됨으로써 남북경협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정상선언]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3통(통행·통신·통관)의 제도적 보장조치 마련, 철도·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남북경협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계획들이 담겼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평화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평화경제 사업이며,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남북경협을 물류기지 건설 및 중공업분야로 확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기획 칼럼

4. 핵문제 악화와 남북경협을 침체(2008~2017)

북한이 2006년부터 북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지속함으로써 핵문제가 악화일로로 걸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도 남북경협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先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 준비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경협은 뒷전으로 밀렸다.

한편 2008년 하순 김정일위원장의 와병으로 북한이 김정은승계체제 구축에 몰두한 것도 남북관계를 정체에 빠트리는 요인이 되었다. 내부단속과 군사력강화에 열중한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대화재개에 호응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남한의 보수정부의 등장, 북한 권력승계의 불안정 등으로 남북경협은 동력을 상실하고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남북경협을 꽃으로 각광을 받았던 금강산관광은 우발적 사건으로 중단되는 운명을 맞았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사업 종사자들이 전원 철수하였다. 2010년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의 자산을 몰수하고 체류인원을 추방하였다. 10여 년 동안 총 19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포격사건은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시키는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정부의 대응책인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금지, 방북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빙하기가 도래하였다.

더욱이 남북경협을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도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3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가동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박근혜정부는 2월 10일 개

기획 칼럼

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12년 동안 남북경협의 모델로 작동하였던 개성공단도 막을 내렸다.

5. 한반도평화와 남북경협의 재개 모색(2018~2022)

2017년 한반도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능력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위기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평화를 모색하는 국면전환이 전개되었다.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개최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 평화체제 전환, 비핵화 원칙이 합의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남북정상 간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의 복원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환경협력, 산림협력, 전염성 확산방지 등 보건·의료협력으로 남북경협의 분야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no deal)이후 자력갱생과 국방력강화를 내세우고 각종 미사일 및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엔 및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실시되기 시작하여 북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

기획 칼럼

년 말까지 부과된 5개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광물·원자재의 수출 전면 금지, 노동자 송출 금지, 대북유류 및 정유제품 공급 제한 등을 포함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는 유엔회원국의 의무이며, 위반 시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 및 수출입 제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거나 돌파하기는 어렵다.

대북제재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모든 면에서 제재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심지어 운송 트럭이 제재 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북한에게 독감 치료를 위한 타미플루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상응조치로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북한은 2020년 이후 3중고(대북제재, 코로나 19, 수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방역보건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완전 폐쇄하여 물적·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지원 및 인도적 협력을 제공하려는 한국정부의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6. 남북협력의 틈새 찾기

남북경협은 핵문제의 전개상황, 대북제재라는 국제적 변수와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필요성 등이 맞물린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 특히 제재라는 상수가 작용하는 한 상호 필요성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문제 해결과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협력의 틈새를 찾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제재 하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할 공간이 극히 협소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촘촘하게 짜인 유엔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2016,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감안 할 때, 교역, 위탁가공, 직접 투자 등은 합작사업금지, 투자금지, 운송수단 수출금지, 물자반입 및 반출 금지, 벌크 캐시(대량현금) 거래

기획 칼럼

금지 등을 규정한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2016년 유엔제재가 실시되기 전에 한국정부의 독자적 조치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사업재개 여부는 역시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제재 하에서 가능하고 명분이 있으며 북한도 필요로 하는 인도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북중 국경교역의 부분적 재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지속과 제재의 영향을 감안할 때 인도적 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기술분야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양자협력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국제기구 등과 다자협력의 틀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백신협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에 대한 방역, 보건,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차원의 위기에 대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산림협력, 수자원공동관리, 환경협력의 구체적 아이টে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수자원보호, 환경보호 등은 앞으로 남북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이다.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하여 환경, 의료, 에너지, 건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유엔 기구와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이 SDGs의 틀을 활용하여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분야의 협력도 필요하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분포 변화, 기상이변에 의한 어장 피해, 폐기물에 의한 해수·내수의 오염 등에 대한 조사와 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지구적 환경변화와 코로나 19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를 감안하면, 남북경협 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관광, 교역, 위탁가공, 공단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남북협력의 틈새가 어찌면 새로운 패러

기획 칼럼

다임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제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남북협력의 새로운 영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협력, 보건·의료협력, 환경협력, 해양수산협력 등은 인도적 차원과 인류 생태계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 칼럼

평화협정의 체결과 해양수산 의제 검토

홍 성 겅

(해양정책학회 연구위원)

1.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의

문재인 대통령은 '21년 9월 22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추진을 작년 연설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연설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함께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의미와 성격을 함께 검토해 보자.

현재의 남북관계를 이루고 있는 ‘정전체제’는 정전협정과 이를 관리하는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골격으로 “교전 중단 상태”를 한국 전쟁이 종료된 1953년 이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는 임시적이며 불안정한

기획 칼럼

상황이므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과거 70년 동안, 수차례 걸쳐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거의 협상과 노력을 다시 회고해 보자. 1992년 역사적인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이 채택하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핵사찰을 협의하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1차 북핵 위기” 발발로 중단됐다.

다음으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가 북·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채택 되고, 미·중·남·북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후 북핵문제가 제기되어, 협상 내용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평화체제의 추진은 시작되지도 못했다.

“2차 북핵위기” 이후, 2005년 “6자회담”을 통해서 “9.19공동선언”이 합의됐다.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공식 논의될 수 있었으나, 다시금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

정전협정은 잠정적 성격만을 갖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4조의 이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이후 3개월 내에, 각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이후 열릴 “정치회의의 결과”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본 정전협정이 운용될 것을 스스로 예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여러 제안이 있기는 했으나 정치회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무산되었고, 잠정적 성격을 예정했던 정전협정은 7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향후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또는 사실상 필요”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기획 칼럼

또한, 무엇보다 ‘정치적 이벤트성의 기본적인 종전선언’과 ‘포괄적인 종전선언’ 중에서 “어떤 성격의 종전선언이 선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체결이므로 법적인 종전을 이루는 확실하고 대표적인 수단이다. 평화협정 체결 및 발효로 인해, 교전당사국간 관계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된다.

1945년 UN 헌장의 채택을 계기로, 그 이전에는 국가 간 관계가 ‘전쟁’과 ‘평화’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평화로 “국가 간 관계”를 전환시키는 대표적 수단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제7장에 의거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와 제51조에 따라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엔헌장체제”에서는 선전포고를 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쟁의 개시”라는 불법에 대하여 “유엔헌장”은 그 불법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와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불법침략”으로 개시되었으며, 기술적 차원에서 전쟁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체결이므로 법적인 종전을 이루는 확실하고 대표적인 수단이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의 주체”는 전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일방은 ‘유엔군사령관’이고 타방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다. 즉, 정전협정은 군(軍)사령관들 간에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특정기간’ 군대 간에 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체결된다. 반면에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평화로 국가들 간 관계를 전환시키기

기획 칼럼

위해 체결된다.

정전협정 체결의 주체와 평화협정의 협정체결 주체가 동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예를 들어 “남·북·미·중” 4자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협정에서 법적으로 종전을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종전을 법적으로 명확히 언급해야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전제가 명확해지고, 이후 남북 또는 북미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의 체결에 있어 유념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여기서는 “해양수산분야”에서 남북협력의 문제들과 관련되는 중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2. “국경선”과 “군사분계선”

1953년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에서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남북 간 국경선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 전문을 보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한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민족공동체 내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기획 칼럼

향후 체결될 평화협정에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헌법적 논란”을 예고한다. 남북이 국경선이 아닌 특수한 관계와 지위를 갖는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선의 성격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독특한 지위를 반영하는 경계선으로 규정된다.

3. “평화협정” 이행의 실효성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협정 당사국들이 과거 정전협정 상의 여러 조문들을 상당수 위반한 전례에 비추어,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평화협정의 위반”에 대한 문제는 한국 또는 미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전협정이 종료되었을 시점부터,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평화협정만 체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군사분계선의 국경선 또는 경계선으로 전환문제 등 북한이 평화협정위반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평화협정 내에 실효성 있는 분쟁의 해결절차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협상의 실무적 절차의 경우에 북한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에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해 평화수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출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평화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한국 정부 스스로 평화협정 체결 시한을 설정하는 경우 협상력을 대폭 상실한 채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획 칼럼

4. 북방한계선(NNL)의 갈등

정전협정은 오로지 “한강 하구의 수역”까지만 군사분계선을 설정했을 뿐,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서해에서 양측이 ‘군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은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하고 우리 해군의 초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동해 NLL은 군사분계선의 연장이었다. 서해에서의 NLL은 ‘3해리 영해’ 개념을 기초로 대략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즉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의 중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1953년 8월 30일 이후 약 2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 존재하는 NLL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NLL을 이용해서 북한은 NLL 이북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을 확인받는 상황이었다.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북한 간첩선의 NLL 월선을 부인하며 NLL 존재 및 NLL 이남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1973년부터 북한은 해군력을 강화하여 의도적으로 서해 NLL을 빈번하게 침범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1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같은 비극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1991년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검토해 보자. 1991년 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정 또는 묵인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니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이후에 북한 태도는 급변한다. '99년 9월 2일 북한은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명의로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기획 칼럼

제2항은 “조선 서해 해상 우리의 영해 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 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한다.”고 언급했다.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00년 3월 23일 해군사령부 명의로 ‘5개 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를 선언하면서 1999년 선언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 해상분계선은 ▲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유엔군 관할하에 있는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 31분00초) ▲ 북측 관할지역인 웅도와 유엔사 관할지역인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1분12초, 동경 124도55분) ▲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 (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섬의 북쪽 해상수역을 북한 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둘째, 북방한계선은 무효이며 셋째, 서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한 논의를 보면,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5조를 통해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5조에서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남북 간 합의는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린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로 진행하기

기획 칼럼

로 한다.”

①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②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 이용, 입어로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언급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남북 간 ‘일정수역’을 창설할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그 자체를 남북군사당국회담의 합의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NLL 관련 논의는 거론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논의된 NLL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문점 선언 제2조 제2항은 “남과 북은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재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선언했다.

‘평화수역’이라는 용어에 대해, 판문점선언이 최초로 ‘NLL일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군사분야 합의서 제3항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공동어로수역의 설치 등의 시범적 시행을 합의했으나 이후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공동어로수역의 설정과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합의는 과거에도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남북 간 군사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다.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된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한 적이 있다. 또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

기획 칼럼

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어로 수역의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은 수역설정에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남북갈등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반복된 상대방의 양보만을 주장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에 대한 합의는 실행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합의사항으로 평가된다. 고위급 남북회담에서는 무력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어로수역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양측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 군사당국자 간의 군사회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상황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게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회담이 본격 추진될 상황을 대비하여 해양경계를 이루는 NLL 인근수역에서 어업인 조업과 어장의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의 진전에 대비해서 특정수역에 대한 어업인들의 조업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책의 수립은 필요할 것이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北 리뷰

[서평]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강동완 저)

허 선 혜

(전북대학교 국제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신진연구자 소개

허선혜 박사는 2020년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중심으로, 2020)를 취득한 후, 현재 전북대학교 국제융합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교수라는 말보다 통일덕후로 불리길 원하는’ 강동완 교수의 2021년 11월 신간이다. 그는 현장을 뛰는 북한 전문가로 북한의 면면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여 통일을 위한 한 길 만을 걷고자 하는 강한 열의를 지닌 학자이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모습을 전해 왔는데, 이 책 역시 같은 의도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어떤 종류일까?’라는 호기심과 더불어 북한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직접 가볼 수 없는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학문적 열정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전제하고 있는 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 사회상에 대한 단초를 북한의 생활쓰레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여 저자는 단순히 북한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별 상품의 포장지에 그려진 브랜드, 서체, 디자인, 캐릭터, 색상 등을 통해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을 수집하고 이해한다. 나아가 학자로서 저자는 북한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들의 생산 실태와 현황 등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에 자력갱생 기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북한당은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을 질타하면서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북한 상품을 우리가 직접 입수해 볼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풍습, 그들의 소비문화, 생산현황과 상품의 질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상품 포장지에 표현된 브랜드와 디자인 요소를 통해 그들의 소비문화 수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北 리뷰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국면 속에서 사실상 남북 경제교류가 차단되어 있기에 북한 상품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 역시 마땅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다양한 북한 상품을 접하고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해안가이다. 북한의 생활쓰레기가 바닷물을 타고 내려와 우리나라 해안가까지 밀려왔던 것이다. 저자는 우연히 백령도 여행 중에 한글로 쓰였으나 한국제품은 아닌 포장지 하나를 발견한 뒤, 1년 동안 이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전 지역 해안가를 누비고 다녔다고 한다. 그 결과 그의 표현에 의하면 ‘소중한 자료이자 보물’인 북한 생활쓰레기를 총 708종 1,414점이나 수집할 수 있었다. 비록 내용물은 없는 포장지뿐이지만 상품의 브랜드, 상호, 디자인, 색상, 생산 공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어렵게 수집한 북한 생활쓰레기를 통해 그는 제품 포장지에 표현된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북한을 읽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있을까? 북한의 생활쓰레기, 그것도 해안가에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를 가지고 북한 사회를 읽는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니 말이다. 이 신선하고 획기적인 시도는 단순히 북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꽤나 훌륭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할까?”, “북한에서 생산한 상품은 어떤 디자인과 브랜드일까?”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한 북한 제품포장지를 당과류, 제빵류, 음료류, 유제품류, 식품류, 양념류, 주류와 담배, 의약품류, 잡화류 등 9가지로 분류하고 개별상품의 상표, 생산공장, 주성분 등 제품 정보와 서체, 포장재질, 캐릭터 디자인, 상표 등 산업미술 요소들의 정보를 소개했다.

저자도 밝혔듯 포장 디자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고려되는 요소인데, 북한에서 인민에게 공급하는 생활소비품목에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선입견이었고 북한상품도 제품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상품명, 디자인, 캐릭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신선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北 리뷰

인상적인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북한상품은 제품포장지에도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제품 포장지의 문구는 제품의 특성을 담는 것과 동시에 사상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세탁세제류의 포장지에는 ‘가정주부들의 벗’, ‘여성들의 벗’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 문구들이 제품이 쓰인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가사노동은 여성들의 몫이라는 사실 역시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제품포장지를 통해 북한에서 통용되는 성역할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포장지의 서체도 흥미롭다. ‘초콜레트’ 상품에서는 제품별로 사상을 담은 고유한 서체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상표와 도안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포장지를 디자인했는데 언뜻 헬로키티 캐릭터와 흡사한 형태를 사용하기도 했다.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과장 표기한 것도 눈에 띈다. 어린이들의 키 크기부터 성인들의 당뇨병 예방과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고 표기된 ‘스피룰리나 크림소단설기’, ‘부인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효능효과가 적힌 생리대 상품의 과히 ‘혁신적인’ 효능은 보는 이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 디자인을 카피한 디자인도 과자류 제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장마당을 통한 한국제품 유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분석된 고유한 서체, 독특한 모양, 다양한 색상의 캐릭터로 꾸며진 북한 제품의 포장지는 산업미술을 강조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하는 북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나아가 주민의 생활상과 사회상까지 엿볼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북한기업은 제품의 포장지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소비자로서 주민의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상품의 종류와 재료 구성성분 등으로 미루어보아 경제발전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 또한 동시에 유추해볼 기회를 이 책은 제공한다.

북한 주민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주민의 삶과 일상이 궁금한 일반독자로부터, 북한 상품의 브랜드, 색상, 서체, 상표 등 산업미술 요소들을 파악하고 활용하고자 하거나 북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통해 경공업 생산 수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학생과 연구자까지, 그리고 남북한 통합의 길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북한 알기

북한 드론: 방송 촬영에서 농사까지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최근 북한의 드론 사용이 각 분야로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 주로 군사 분야에서 정찰목적으로 쓰이던 무인기가 방송 촬영, 농사일에까지 공개적으로 등장하며 쓰임새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2022년 1월 16일에 방영한 방송프로그램 <포태산 새 보금자리>는 삼지연시 포태산 기슭에 새로 조성된 살림집의 전경을 보여주며 “원수님 사랑이 크다”고 선전하였다. 아래 사진의 왼쪽과 같이 조선중앙TV 방송팀은 드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전체적인 풍광에 드론 촬영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진: 방송팀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위) 삼지연시 포태산기슭 새살림집 전경(아래)
2022.1.16. 조선중앙TV에 방영

북한 알기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부감 화면이 눈에 띈다. 사진의 아래 왼쪽과 같이 줄지어 늘어선 살림집을 보여주며 두메산골이었던 포태산 기슭이 변모되었다고 자랑하는 장면과 사진 아래 오른쪽과 같이 밤에 촬영한 모습을 보여주며 삼지연시에 전기가 잘 들어온다고 자랑하는 장면이다. 드론은 효과적인 체제 선전의 도구인 셈이다.

2018년 열병식 생중계에서 처음 활용되었던 드론은 이제 특수한 이벤트뿐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담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전영선 교수에 따르면 방송영상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이용해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최신기계와 변화된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이며 김정은 통치스타일의 시각화를 강조하는 것이다.¹⁾

또한 북한은 실질적인 농사일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조선중앙TV는 지난 5월 30일 평안북도 염주군의 내중협동농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농업생산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농사일을 험하게(수월하게) 하고 있는 내중협동농장의 경험을 따라 배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 농사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과학적인 농사체계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진: 드론을 조종하는 북한 농부(좌)와 방제작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드론기(우)

자료: 2021. 5.30. 조선중앙TV에 방영

북한은 문화예술분야에도 무인기를 등장시키고 있다. 2021년 6월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우리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 무인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제명을 새기고 바닥에는 레이저투영기술에 의한 신비

북한 알기

한 화면이 연이어 펼쳐졌다”며 새로운 예술분야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형식을 개척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며 권장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역시 군사용이므로 북한의 드론 기술 추세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1)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4601>(검색일: 2022년 3월 16일)

北 소식

북한 해양·수산 기사 ('22.1~3월)

진 희 권

(인제대학교)

<2022년 1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신문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p>-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p> <p>-김정은 총비서는 회의에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p> <p>-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을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총평</p> <p>-“건재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림업, 룡해운, 철도 운수 부문에서 국가적 건설과 생산적 양양을 안받침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행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p> <p>-2022년 총적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것”이라고 밝힘</p> <p>-“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며,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부문에서 물고기 생산을 늘이고 양어 양식을 잘하는 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p>
노동신문	1월 3일	유람선 <평양1>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운항하는 유람선 <평양1호> 탑승기

北 소식

내나라	1월 4일	금야의 습지들	<p>-함경남도 금야군의 습지소개</p> <p>-동해로 흘러드는 금야강과 덕지강 하류일대에 약 2,000여 정보에 늪, 진펄, 갈밭, 소금밭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존재하며, 해마다 200여 종의 새들이 관찰</p> <p>-이 지역은 1995년 ‘금야철새(습지)보호구’로 지정되었으며, 흑고니, 큰기러기, 큰물닭 등 10여 종의 ‘위기종새’들과 2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음</p>
노동 신문	1월 6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신심드높이 떨쳐나섰다	<p>-2022년 1월 5일,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위한 25만산 대발파 진행</p> <p>-‘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월도 간석지 건설을 올해 중으로 끝낼 계획</p>
Voice of Korea	1월 8일	보물고	<p>-‘금산포젓갈가공공장’ 소개, 북한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공업적방법’으로 젓갈을 생산하는 공장</p> <p>-수산물에 갖가지 부재료를 섞어 서로 다른 맛과 향을 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p>
노동 신문	1월 11일	엄중한 후과를 몰아오는 바다의 산성화	<p>-‘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 내용을 통해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 전달</p> <p>-WMO의 자료를 인용, 산성화로 바다의 화학성분이 변하며, 바다생태계를 엄중히 파괴하고 있으며, 양식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후과를 초래한다고 보도</p>

北 소식

조선 중앙 통신	1월 15일	경공업, 수산부문에서 경제작전 토의 심화	<p>-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경공업, 수산 부문에서 인민 생활 향상 대책 마련 중</p> <p>-수산 부문에서는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선차적으로 주목하며 수산자원 보호·증식, 양어·양식 확대 방안 토의 중</p> <p>-전국의 강과 호수, 저수지에 치어 방류 사업을 신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중</p>
조선 중앙 통신	1월 15일	서해지구 수산단위들 겨울철배수리, 정비에 힘을 집중	<p>-‘남포수산사업소’, ‘운전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 등 서해지구 수산 단위들 어선 수리와 부품, 자재 확보에 주력</p>
류경	1월 16일	몸소 지어주신 고기배이름	<p>-김정은 총비서의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방문 일화 소개</p> <p>-김정은 총비서는 수산 부문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전선이라며 성능 좋은 어선을 많이 건조할 것을 지시, 새로 건조하는 어선의 이름을 ‘황금해’로 명명</p>
노동 신문	1월 16일	천연기념물 -해칠보 무지개바위	<p>-함경북도 명천군에 위치한 칠보산 ‘해칠보무지개바위’ 소개. 바위는 기묘할 뿐 아니라 해식굴로 해안지형 형성과정을 보여주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소개</p>
메아리	1월 17일	뽕물등에를 리용한 단백질먹이생산 기술을 새롭게 확립하는 성과 이룩	<p>-최근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이상적인 단백질원으로 알려진 뽕물등에를 이용한 과학적 단백질먹이 생산기술 확립</p> <p>-뽕물등에는 각종 유기오물을 먹고 자라 많은 단백질과 지방질을 체내에 축적하기 때문에 단백질 먹이로 이용할 수 있어 축산 및 양어에 실용적 의의가 큼</p>

北 소식

Voice of Korea	1월 20일	양어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p>-평양 ‘운하종어사업소’의 치어 생산 성과 보도</p> <p>-사업소에서는 어종에 알맞은 과학적 물관리 방법 확립, 공기공급기 설치, 뿔물등에 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약하고 치어 생산 확대</p> <p>-지난해 잉어, 룡정어, 기념어 등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해 대동강과 보통강에 방류</p>
우리 민족 끼리	1월 21일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령토강탈책동	<p>-최근 일본 외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 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 기본적 입장에 입각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 한데 대한 비판</p> <p>-일본이 당장 독도와 관련한 거짓 여론전과 부당한 행태를 중지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p>
류경	1월 23일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 추진 -국토환경보호 부문에서	<p>-국토환경보호 부문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실행 중</p> <p>-“해안보호 시설물 건설 및 보수·보강을 다그쳐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 구체화</p>
통일의 메아리	1월 24일	새해의 첫 다시마생산 시작	<p>-‘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해안사업소’ 등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 내 바다 양식 단위들 다시마 생산 시작</p>
노동신문	1월 25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실제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p>-인민생활을 안정·향상 시키는 것이 최종대사라고 강조하며 농업, 수산업, 경공업, 건설 부문 과제 제시</p> <p>-수산은 농산, 축산과 함께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3대축이며, 수산물 생산 증대는 농업부문의 다수확 만큼 중요</p>

北 소식

노동 신문	1월 30일	수산자원 보호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p>-수산자원은 나라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며, 인민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하며 보호 대책 제시</p> <p>-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 인공 어초조성사업, 계획적 수산물 생산, 치어방류 등의 방안 제시</p>
노동 신문	1월 30일	천연기념물 -리원구석	<p>-함경남도 리원군 앞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리원구석’ 소개</p> <p>-‘리원구석’은 흰색 또는 누런흰색을 띠는 긴 둥근 모양 돌</p> <p>-풍화작용으로 떨어진 규암 덩어리가 파도에 의해 닳아 둥글고 매끈한 닳알 모양의 구석으로 변형</p> <p>-구석은 마광기나 분쇄기에 이용되며, 건축물의 장식품으로도 활용</p> <p>-‘리원구석’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자연구석으로 풍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p>

北 소식

<2022년 2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조선의 오늘	2월 3일	평양송도각을 찾아서	-강원도 전통 특산음식으로 유명한 ‘평양송도각’ 소개 -‘평양송도각’은 강원도의 수산물로 재료를 한 요리로 유명하며, 특히 동해의 대합조개를 이용한 ‘원산조개밥’이 인기 메뉴
노동신문	2월 4일	물고기들의 서식에 위험을 조성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물고기 서식 위험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 보도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물고기들이 서식 지역을 이동, 멸종 가능성이 높으며, 물고기들의 번식에도 큰 타격을 준다고 전달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는 인류로 하여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노동신문 노동신문	2월 6일	민물고기자원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수산자원 보호증식에서 민물고기 보호증식이 중요 -민물고기 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종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여, 해당 수역의 자연먹이 자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먹이사슬이 짧은 산업적 어종의 물고기 비율을 높여야 함 -민물고기 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번식조건을 잘 조성해야 함 -자연수역의 물고기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자원조사를 하여 수역의 자연먹이 이용률, 수질 및 수생물학적 조건의 변화, 물고기 자원의 경제적가치를 밝혀 새로운 어종을 순응시켜야 함
노동신문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2월 6일~7일 진행 -2021년 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내용을 뒷받침

北 소식

		2022년 과업에 대하여	<p>하는 결산 및 예산 수립과 후속 입법 조치의 성격</p> <p>-회의에서 진행된 김덕훈 내각총리의 보고 중 해양수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p> <p>-“교통운수부에서 화차와 화물자동차, 짐배수송” 확대</p> <p>-“수산부에서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생산” 확대</p>
노동 신문	2월 8일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 수리정비에 힘을 넣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려 수산부문의 앞장에 서겠다	<p>-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 김성원 대의원 토론 내용 보도</p> <p>-‘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는 2021년 최고생산량을 기록했으며, 올해 생산을 위해 고기배 수리정비와 현대화, 부속품 자체생산 및 재생, 수산물 가공품 생산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음</p>
노동 신문	2월 20일	천연기념물 -몽금포 코끼리바위	<p>-황해남도 용연군, 몽금포코끼리바위 소개</p> <p>-코끼리바위는 중생대 백악기 대보산주층의 석영반암이 바다의 해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코끼리 모양으로 변형</p> <p>-코끼리바위의 높이는 약 15m, 코부분의 둘레는 약 3m로 밀물때에는 코끼리가 긴 코를 바닷물에 드리우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임</p>
노동 신문	2월 26일	2021년 중요공업부문과 수산, 양어부문 사회주의경쟁 총화 진행	<p>-사회주의 경쟁에서 ‘양화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 ‘평양시양어관리국’이 수상</p>
노동 신문	2월 27일	우리 나라의 명승 송단	<p>-함경남도 리원근에 위치한 소나무숲 ‘송단’ 소개</p> <p>-기록에 따르면, 원래 한그루의 소나무도 없던 곳이었으나 이 고장 주민들이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해 숲을 조성</p>

北 소식

<2022년 3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3월 2일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를 현지료해 진행 중, '해주항' 방문,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화물 하선능력을 높일 것을 지시
조선 중앙 통신	3월 5일	여러 부문에서 2월 인민 경제계획 완수	-수산 부문 2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노동 신문	3월 5일	김덕훈 내각총리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와 소금공업국안의 여러 단위를 현지료해	-김덕훈 내각총리, 소금공업국 소속 '온천타일공장', '귀성제염소' 현지료해 -온천타일공장의 개건 현대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면서 기일 내에 공사를 무조건 끝낼 것을 지시 -귀성제염소의 소금 생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증산을 독려
노동 신문	3월 5일	단백먹이문제를 풀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양어 활성화를 위해 먹이문제 해결이 중요 -'순천화력발전소 양어작업반'에서는 단백품을 발효한 먹이 생산, 가축의 털 및 부산물을 이용한 먹이 생산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
노동 신문	3월 10일	룡남산의 과학자가 걷는 탐구의 길	-북한에서 처음으로 '지하초염수(염지하수)'를 이용한 소금 생산 방법을 개발한 '김일성종합대학 자원과학부' 김룡홍 교수의 성과 소개 -10여년 전, 북한에는 '지하초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고 '지하초염수' 매장지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한 소금 생산 방법을 확립

北 소식

조선 중앙 통신	3월 14일	남포수산 사업소에서 올해 첫 출어	-3월 13일, '남포수산사업소' 올해 첫 출어
노동 신문	3월 15일	논판양어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평안남도 숙천군 '련화농장 9작업반'의 논판양어 성과 소개
노동 신문	3월 19일	날바다를 밀어내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간다	-평안북도 '월도간석지' 건설 현장의 성과 소개 -‘월도간석지’는 평안북도 철산군 장송지구부터 월도를 거쳐 보산지구를 연결하는 대공사로 완공 이후 수천 정보의 토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 -완공을 앞두고 있는 ‘3호방조제’와 ‘2호방조제성 토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노동 신문	3월 20일	천연기념물 -홍원술도	-함경남도 홍원군의 천연기념물 ‘홍원술도’ 소개 -‘홍원술도’는 동서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섬들은 낮은 언덕이었으 나 신생대 제3기에 동해지역이 내려앉으며 섬이 되었음 -‘홍원술도’는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졌으며, 풍 치상 의의가 있는 대상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함

北 소식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2.1~3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3월 7일	Ghost ship: North Korean fishing trawler presumed scrapped returns from the dead	<p>-2018년 이후 사라졌던 북한 어선 '삼천리1(Sam Chon Li 1, IMO6807967)'호가 북한 조선중앙티비 영상에 등장</p> <p>-Marine Traffic에 따르면 '삼천리1'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는 2018년 말 이후 확인된 바 없음</p> <p>-IMO는 NKnews에 해당 선박이 파손(broken up) 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전달</p> <p>-조선중앙티비 영상에서는 '삼천리1'호가 온전한 상태로 신포시에 정박한 모습 확인</p> <p>-'NKnews'가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2021년에도 같은 부두에 여러 번 정박했음</p> <p>-'삼천리1'호는 3,800톤 트롤어선으로 길이가 102m에 달하며, 해당 규모의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AIS를 통해 위치를 발신해야함</p>
2월 21일	North Korea continues to export sanctioned coal, import Chinese humanitarian aid	<p>-'UN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 인용 보도</p> <p>-2020년 9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수십 척의 북한 선박이 불법으로 석탄을 중국에 수출</p> <p>-이 중 최소 9척의 선박이 2021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중국 옌타이 항구에서 화학비료, 살충제, 농산물 등 '인도적 지원 화물(humanitarian aid cargo)'을 선적</p> <p>-9척의 선박에는 '홍봉 3(Hung Bong 3)', '강흥(Kang Hung)', '난대천(Nan Dae Chon)', '룡화 3(Ryon Hwa 3)', '삼진 8(Sam Jin 8)', '태평 2(Tae Phyong 2)'호 등인 것으로 확인</p>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2월 11일	Report alleges Taiwanese firm helped smuggle illicit oil into North Korea	<p>-‘UN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 인용 보도</p> <p>-대만 소재 ‘Cheng Chiun Shiooing Agency Co Ltd(CCSA)’가 두 척의 선박(Sunward, Sky Venus)을 이용하여 수만 톤의 석유를 북한에 불법 공급 한 것으로 의심</p> <p>-‘Sunward’호는 2021년 3월 말에서 4월초 까지 최소 4척의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것으로 의심. 이 기간 ‘Sunward’호는 ‘타이중’에서 대만 북쪽 해역 사이를 여러 차례 운항했으며, 운항 중 적재 화물의 중량이 변동된 사실이 AIS 시스템을 통해 확인됨</p> <p>-‘Sky Venus’호는 최소 8건의 불법 선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p>
2월 10일	Russian court extends detention of North Korean fishermen accused of attack	<p>-지난 2월 8일, 러시아 법원은 2019년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어부 1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3개월 구금을 연장한다고 밝힘</p> <p>-2019년 9월, 북한 어부 18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각목, 칼, 도끼 등으로 공격, 어부 중 한명이 사망했으며 17명은 체포. 2020년 7월, 두 명의 어부에게 노역 4년이, 1명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음</p>
1월 7일	UNICEF says aid has cleared North Korea quarantine, on its way for distribution	<p>-2021년 10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을 통해 운송한 구호물자의 격리가 해제되어 곧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p> <p>-북한은 2020년 1월 이후 국경을 폐쇄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다롄-남포 항로도 사실상 차단했음.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다롄-남포 항로로 전달 받기 시작</p> <p>-유니세프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항로를 통해 전달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원물자의 격리해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p>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1월 7일	North Korea's fuel trade on pace to recover in 2022: Imagery	<p>-‘NKpro’가 1,385개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북한 석유 및 석탄 터미널에 약 300척의 선박이 정박한 것으로 확인</p> <p>-분석에 따르면 석유 운송은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북한 내 석유 가격도 7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p> <p>-석유 운송 선박의 수송 능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최대 67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 이는 유엔이 정한 수입 제한량 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치</p> <p>-북·중 간 육상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과 대조적으로 해상 활동이 증가된 것에 주목해야 함</p>

북한 통계

북한 물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상 용

(데일리NK 편집국장)

데일리NK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물가’에 주목해왔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촉발된 계획경제 붕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주민 생활의 변화 추이를 ‘가격’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우리는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주목했다. 전국적으로 약 500개 설치된 공식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어느 가격선에서 팔리는지를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장마당 시절부터 사실상 국정가격은 파괴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비리와 혼란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국가공급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비공식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없었다. 이제는 시장가격이 북한 당국도 인정하는 공식가격(물론 평양 간부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단행할 땐 아직 ‘국정가격’을 적용하고 있다)이 됐다.

북한 시장은 우리와는 다르게 품목이 같은 매대가 몰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쌀 장사꾼들은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그 다음 남새(채소)나 생필품 매대가 있다.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품목이 우위를 점하는 식이다. 이에 우리는 조사하고자 하는 품목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대체적으로 한 곳을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가격을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와 협력해 왔던 소식통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눈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말 그대로全民(全民), 전국(全國), 전품(全品)의 시장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달돼 있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 통계

는 점을 확인 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팔아야 했고, 또한 사와야 했다. 모든 주민들이 장사에 나섰으며,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사람’만 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장사꾼이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곳곳에 전화를 돌리면서 ‘오늘의 환율’ 및 ‘오늘의 물가’를 확인하곤 한다. 오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이런 ‘비즈니스’ 루트를 활용하여 전국 곳곳에서 현재 시세를 재차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 파악에서 중요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 시대, 북한 시장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들린다. 또한 지난 1월 중순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이후 외화 환율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에 축적된 쌀값과 환율은 통계 자료가 부족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제공할 수산물 가격을 통해 북한 내부 경제 상황과 미래를 같이 그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통계

북한의 물가: 환율, 쌀, 휘발유 그리고 수산물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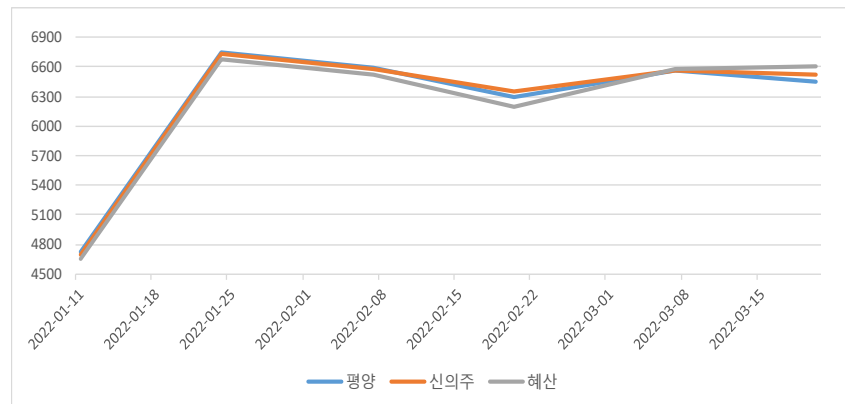
북한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할 정보는 많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판단을 내릴만한 수량화된 데이터도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및 대북정책을 수립함에 기본이 되며 중요하다. 현재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자료는 한국은행 데이터로 2020년 기준 북한의 명목 GNI는 296달러, 1인당 GNI는 1,168달러로 한국의 1/27 수준이다.²⁾ 이러한 생산기반 경제추세와 더불어 주민의 보건·영양지표를 이용한 후생 지표를 이용하여 북한경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의 소비자물가와 환율을 통해 각각 소비재와 외화의 수급 여건을 파악한다.³⁾ 현재 입수 가능한 북한 시장의 소비자물가는 북한의 달러 환율, 쌀값, 휘발유 가격(북한 돈) 정도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통계가 매우 제한적 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세 가지 자료를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식직장에서 받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통상 북한 돈 4,000~ 5,000원 수준으로(공식 혹은 계획경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함께 배급제가 붕괴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비공식경제영역의 비공식소득에 의존하며 삶을 영위한다(시장경제).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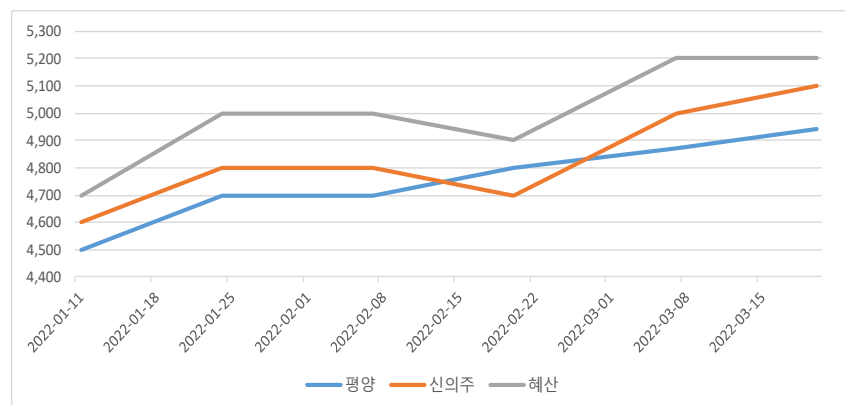
북한 통계

<그림1> 달러당 환율



자료: 데일리NK

<그림2> kg 당 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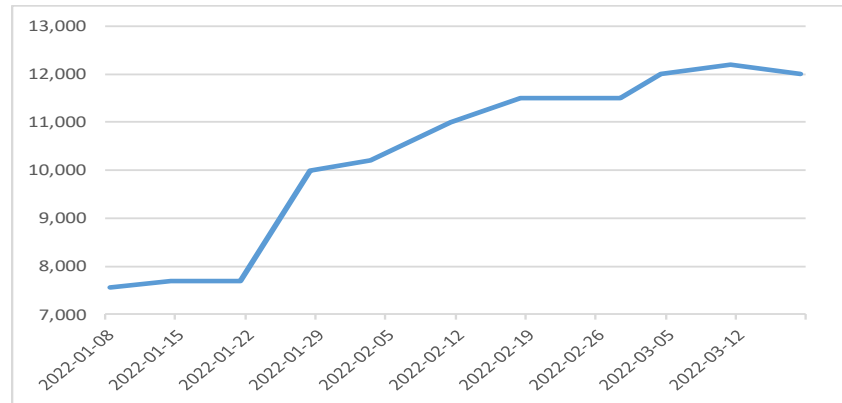
자료: 데일리NK

먼저 데일리NK가 제공하는 북한 원-달러 환율은 1월 11일 1달러에 4,720 원이었던 것이 1월 말경 6,750원 정도로 꺾충 뛰어오른 뒤 6,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큰 차이는 없다. 쌀값의 경우 연초 4,500원 선이었으나 3월 들어 5,000원을 넘었다. 쌀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해산>신의주>평양 순으로 가격이 높다. 물가 품목 중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휘발유로 1월 8일 1kg당 7,550원이었던 가격이 3월 18일 들어 12,000원까지 치솟았다. 두 달 만에 60%가량 오른 셈이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북한 물가지수가 오름세인 가운데 그 원인을 놓고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원화 가치 하락을,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 통계

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북한의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⁵⁾

<그림3> 양강도·함경북도의 kg 당 휘발유 가격



자료: 아시아프레스

다음은 북한의 수산물 가격을 알아보자. 북한의 지역별 수산물 가격은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북한 시장자료로서 한 달에 두 번 가격조사가 가능하다. 먼저 동해안을 대표하는 원산, 청진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가격을 파악하였고 서해안은 대표적으로 평양과 신의주를 선별하여 해당 지역의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품목과 가격 현황을 조사하였다. 차후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더욱 정밀한 수산물 유통실태와 가격 현황이 파악되겠으나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의 수산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는 원산, 청진과 같은 동해안 지역과 비교해 평양, 신의주와 같은 서해안 지역의 수산물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동해안의 원산지와 멀어질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바지락(북한말 바스레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북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과 같은 서해안에서 재배하는 양식업 품종으로 서해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평양, 신의주 등지가 동해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바지락은 서해에서 양식하기 적합한 대상종으로 압록강 하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에 이르는 연안대에서 큰 강들이 흘러드는 극히 제한된 일부 수역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양식하고 있는 품종이다.⁶⁾ 마지막으로, 앞서

북한 통계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물가가 오름세인 가운데 다른 품목과 연동되어 수산물도 오름세를 보인다. 차후 자료가 축적될수록 보다 정확한 추세 파악 및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지역별 수산물 가격

(단위: 1kg, 북한 돈)

날짜	이면수				청어				도루메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2022. 3.7	24,100	29,500	19,300	18,900	18,400	19,800	15,000	15,300	10,000	14,600	8,400	8,600
2022. 3.21	24,000	29,400	19,500	19,100	19,100	21,200	15,000	15,300	10,000	14,800	8,600	9,000

대구				동태				바지락				털게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청진
27,400	31,100	22,500	22,500	28,000	34,000	22,900	23,000	12,000	12,000	15,500	13,600	30,000
27,400	31,200	22,800	23,100	28,400	35,200	23,400	23,700	12,000	11,700	16,000	14,000	

자료: 데일리NK

- 2)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검색일: 2022년 3월 23일)
 3) 최지영,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beeba32d-b8df-4af2-84e3-1c753d73d797>(검색일: 2022년 3월 23일)
 4) 채수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가계소득 불평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0.
 5)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0227&ref=A>(검색일: 2020년 3월 23일)
 6) 홍성걸·베른하르트 젤리거, 북한 양식현황 및 기술발전 전망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